

6년전 아동 성추행 출소자 광주서 또 9세 여아 성폭행

2008년 전자발찌법 시행 이전 전과자 관리 구멍

광주에 사는 전모(49)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2시께 북구 오치동 모 상가 앞길에서 놀이기구를 타고 있던 A(9)양에게 접근했다.

전씨는 A양에게 “맛있는 과자를 사주겠다”고 피어 150m 떨어진 4층 짜리 건물 1층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범행 장소는 전씨의 집에서 200m 가량 떨어진 곳이었다.

광주지방경찰청 원스톱기동수사대는 11일 전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전씨는 지난 2004년 6월 초에도 같은 동네에 사는 B(6)양을 강제추행해 10개월간 광주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이듬해 4월 만기출소했다.

그러나 전씨는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한 뒤에도 어떠한 법적인 감시를 받지 않았다.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발찌’ 제도가 전씨 범행 후 4년 가량이 지난 2008년 8월에야 시행됐기 때문이다.

또 전씨는 ‘성범죄자 재범 방지교육’을 받아 ‘신상정보공개’ 대상도 아니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2008년까

지는 ‘재범 방지교육’을 받을 경우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부산 여중생 납치 살인 사건’ 이후 본격적인 신상공개 및 ‘전자발찌’ 제도 도입 전 아동성범죄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11일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국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는 121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는 현재 3명이 착용 중이다. 또 2008년 ‘전자발찌법’ 시행 이후 2년간 전국적으로 574명의 성폭력 범죄자들이 법원으로부터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았다.

‘전자발찌’는 13세 미만 아동 상대 성폭력범이나 2회 이상의 성폭력범 등에 대해 위치추적장치가 부착된 ‘발찌’를 채우는 제도다. 착용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검찰은 성폭력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하고 있다. 또 2001년 ‘신상공개’ 제도가 도입된 후 2008년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성범죄자의 경우 자신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경찰서에

사진·주소·차량번호·직장 등을 신고해야 한다.

신상정보는 관할지역 부모와 교육기관장 등이 열람할 수 있다. 광주·전남지역 아동 성범죄 신상공개자는 모두 51명이다. 전국적으로는 318명이다. 열람대상자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가 월 1회 이상 접촉해 특별 관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전씨는 2008년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전까지는 ‘재범교육’을 받을 경우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성범죄자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또 6년 전 범행을 저지르고 복역했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안 돼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았다.

전남대 법과대학 차선자 교수는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는데, 초범·재범 등 일정 기준을 마련해 소급 적용하는 것은 찬성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재범 가능성이 큰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전자발찌법을 소급 적용, 법 시행 이전에 기소된 성범죄자에게도 적용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뜨거운 초등학교 회장선거 열기

로 기호를 표시하고 있다.

11일 오전 광주시 남구 대성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2010학년도 전교 회장, 부회장 선거에 출마한 학생들이 지지를 호소하며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대학 2곳 비리 수사

‘교비 횡령’ 총장실·총장 자택 압수수색

직원 채용·연구비 부당 집행 혐의 포착

이명박 대통령이 ‘토착·권력형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대학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 되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전남 모 전문대학 총장실과 총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학사운영 관련 서류와 컴퓨터 등을 압수해 교비 등 수십억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광주 모 전문대학에 대

한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 대학의 국비 사업 연구비 집행과 직원 채용과 관련, 비리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비 지원 연구과정에서 연구비가 부풀려졌거나 교직원 채용 등에서 있었을지 모를 비리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대학 측에 공문을 보내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경찰은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학사행정 등 대학 운영 전반에 걸쳐 적법성을 따질 방침이다.

이 대학 관계자는 “경찰이 요구하는 자료가 워낙 방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제출해야 할 지 논의중”이라며 “아직은 조사 내용이 확실치 않아 뭐라 입장을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광주·전남지역 다른 대학에도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대학 비리에 대한 수사는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나원침 (8059) 김장두



협박·갈취 사이버기자 입건

전남지방경찰청 공역수사대는 11일 악취가 난다며 환경업체로부터 돈을 뜯어낸 광주·전남지역 H신문사 기자 이모(43)씨를 공갈 혐의로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나주시 문평면 한 환경업체의 물거름 살포 현장에 찾아가 “폐지 분노 배설로 민원이 제기됐다”며 1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

“귀신으로 보인다” 범인 향나무 질라



○…5년 전부터 정신질환을 앓아 온 4대 여성이 대학교 캠퍼스에 식재된 나무를 잘라 경찰조사를 받은 지 불과 나흘 만에 법원 정원에 심어진 나무를 잘라냈다가 또 다시 경찰서행.

○…11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강모(여·45·광주시 북구 중흥동)씨는 이날 새벽 4시30분께 광주시 동구 자산동 광주도동병원 청사 앞 화단에 들어가 수령 10년 향나무의 한 가지를 톱으로 잘라낸 혐의.

○…강씨는 지난 8일 밤 전남대에서 1975년 당시 김종필 국무총리가 식재한 백일홍을 잘라낸 인물로, 11일 경찰조사에서 “나무가 귀신으로 보인다”는 등 횡설수설.

○…경찰은 강씨가 지병이 있었다는 점 등을 참작, 불구속 입건.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DNA 일치…김길태는 혐의 부인

구속 영장 신청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 사건’의 피의자 김길태(33)가 자신의 DNA와 피해자의 몸에서 채취한 DNA가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혐의를 부인해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청은 11일 수사 브리핑에서 “김길태 검거 당시 구강 상피세포에서 채취한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피해자의 몸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김이 이번 사건의 범인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확보된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은 “이양을 알지도 못한 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경찰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은 또 자

신이 검거 당시 달아난 것에 대해 “수배전단을 보고 지난 1월 수배사건 때문에 억울하게 뒤집어쓸 것을 우려해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이 이번 사건의 범인으로 확정되면 무기징역형이나 사형을 선고받을 것이란 사실이 두려워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보고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김은 지난 1997년 A(사건 당시 9세)양에 대한 성폭행 미수 혐의와 2001년 B(여·32)씨 10일간 감금·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을 때도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또 김이 전남 검거 당시 현금 20여만원을 지니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이양 살해 이후에도 절도 등의 추가 범행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 중이다.

한편, 경찰은 11일 김에 대해 강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홍악범 얼굴 필요면 공개”

경찰청

경찰이 지난 10일 김길태(33) 검거 후 압송과정에서 얼굴을 이례적으로 공개된 것과 관련,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홍악범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김종화 경찰청 수사국장은 11일 “얼굴 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면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특강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개정 전에도 국민 알권리와 공익 차원에서 필요하다 판단되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상현 전 의원 징유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1일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범죄사실 위반)로 기소된 김상현 전 새천년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징역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1억6천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 중 무죄가 선고된 6천만원 부분에 대해 “의구심이 들기는 하지만 김 전 의원이 최씨에게 현금 6천만원이 든 소포백을 받았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전교조 시국선언 재판 재정합의부로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강완수 판사는 11일 지난해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광주지부 간부 4명에 대한 재판을 재정합의부인 형사11부(부장판사 김경숙)에 넘겼다고 밝혔다.

을 들어 광주지법에서 형사 단독사건이 합의부로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교조 시국선언 판결’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합의부의 심리 절차를 밟게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합의부는 형사 단독사건 중 사회적 중요성이 있는 사건을 처리한다. 법원장이 사건 배당에 앞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재정합의부

에 맡기거나, 단독판사가 이미 배당 받은 자신의 사건을 재정합의부에 회부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광주지법 양영희 공보판사는 “현재까지 전교조의 시국선언과 관련한 1심 선고에서 전국적으로 유죄 3건, 무죄 2건 등 유무죄가 엇갈리고 있어 보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돼 이 사건을 합의부에 회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된 윤영조 전교조 광주지부장과 김혜주 수석부지부장 등 4명은 이날까지 4차례 공판을 마쳤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PEET / MEET / DEET 전문학원

[약학대]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MDPass 전문학원 출신이 아니라면 합격은 어렵다"

이 한마디를 위해....

심화과정
개강 3월 2일

단일명 기술문제 풀이
개강 5월 3일

FINAL 예상문제 풀이
개강 7월 6일

특설1 기초시작반

2개월 완성
2010년 8월 시험 대비를 위한 기초 필수과목 이수반
개강: 3월 2일

특설2 기초영어

공통영어 TOEFL, TOEPIK 고득점 취득을 위한 초·중·고·대
2~4월 기초과정 5~8월 고급과정
주 6시간제 체계적인 강의
개강: 3월 8일

검정원 최고강사진의
박철 출강 강의

특별초빙

과목: 일반생물학
[한국생물학회, 한국생물학회, 한국생물학회]
이상의 교수님을 특별 초빙합니다

MDPass 전문학원

광주 263-5453, 430-2200 전주 255-9119
mdpass.co.kr (광주 북구청 맞은편)